

제21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23. 11. 29.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23년 11월 29일 14:00 ~ 15:26

2. 회의방식 : 대면회의

3. 출석위원

김 주 현 위 원 장

김 소 영 부위원장

(의결 제338~351호, 보고 제32~34호)

권 대 영 위 원

김 용 재 위 원

이 복 현 위 원

(의결 제339~358호, 보고 제32~34호)

유 재 훈 위 원

김 용 진 위 원

4. 회의경과

(14시 00분 개회)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1) 2023년도 제20차 금융위원회 회의록 및 2023년도 제21차 금융위원회 안전검토 소위원회 의사록 보고

- ☐ 2023년도 제20차 금융위원회 회의록과 2023년도 제21차 금융위원회 안전검토 소위원회 의사록을 서면 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의결안건 심의

- ☐ 의결안건 제338호 『미래에셋증권(주)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미래에셋증권(주)의 불건전 인수행위 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건의하는 내용

- (위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38호 안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증권선물위원회 수정심의안대로 수정의결하겠습니다. 주식 처분 규모 및 처분이익 규모가 크지 않은 점, 실권주로 인수한

주식 중 일부만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반결과를 ‘중대’에서 ‘보통’으로 변경하여 미래에셋증권주식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3,000만 원으로 수정의결하겠습니다.

○ 수정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 의결함

* 만장일치로 수정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339호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주)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주)의 대주주 변경을 승인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40호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변경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은행 LCR 규제비율 95%를 ‘24.6월말까지 6개월 연장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41호 『(주)우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제342호 『(주)국민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제343호 『(주)신한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제344호 『(주)하나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제345호 『농협은행(주)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제346호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제347호 『(주)광주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제348호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일괄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은행검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외국환거래법」상 확인의무를 위반한 8개 은행의 일부 영업점 및 본점에 대하여 외국환업무의 일부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부과하는 내용

○ (위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41호부터 제348호 안건과 관련하여 (주)우리은행 등 8개 은행에 대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안건검토소위원회 수정심의안대로 수정의결하겠습니다. 과거 조치 사례 등은 외국환거래법상 업무정지는 고의의 불법행위 또는 지점의 심각한 내부통제 실패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부과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이에 따라, (주)우리은행 2개 영업점, (주)국민은행 2개 영업점, (주)하나은행 1개 영업점에 대한 업무의 일부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겠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조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 제341호, 제342호, 제344호 안건은 각각 수정의결하고, 제343호, 제345호부터 제348호 안건은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제341호, 제342호, 제344호 안건은 각각 수정의결하고,
제343호, 제345호부터 제348호 안건은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49호 『NH선물(주)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외국환거래법」상 확인의무를 위반한 NH선물 본점에 대하여
외국환업무의 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50호 『통신대안평가준비법인(주)의 전문개인신용
평가업 예비허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데이터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통신대안평가준비법인의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예비허가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51호 『팀웍(주)의 대주주 변경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데이터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KB캐피탈(주)의 팀웍(주)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승인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52호 『신한투자증권(주)에 대한 종합 및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353호 『케이비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354호 『대신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355호 『NH투자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356호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357호 『(주)신한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358호 『(주)신한금융지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일괄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1국장, 은행검사2국장, 은행검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신한투자증권(주) 등 7개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해 임직원 및 기관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

○ (위원) 안전검토소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심의를 했는데, 소위원장님께서 금번 안전들과 관련하여 그동안 논의 경과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늘 상정된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한 7개 조치안의 안전검토소위원회 논의 경과 등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2020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DLF 관련 주요 조치선례가 있었는데, 이중 우리은행 조치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2021년 8월에

선고되었고, 이에 따라 2021년 10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자본 시장법과 지배구조법 위반사항을 분리 처리하기로 결정하였음. 이후에 2022년 3월 14일 지배구조법 위반 관련 하나은행 조치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같은 달 30일 금융위 보고를 통해 지배구조법 위반 7개 조치안의 안전검토소위원회 심의를 잠정중단하고 법원의 입장 등을 충분히 확인 검토한 후에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음. 2022년 12월에 우리은행 조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최종 선고됨에 따라 2023년 2월 23일 안전검토소위원회에서 심의를 재개하였고, 심의재개 후 2023년 11월 23일까지 총 14차례의 안전검토소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특히 DLF 판결의 법리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해당 법리에 따라 제재대상자의 위법성 여부와 조치수준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음. 그 과정에서 제재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한 적법성과 정당성, 제재조치 간 일관성과 정합성,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론의 도출 등에 논의의 주안점을 두었음. 아울러 제재대상자들에게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뿐만 아니라 금융위 안전검토소위원회에서도 대면 의견진술과 서면 자료제출 등을 통해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한 바 있음. 마지막으로 그간 안전검토소위원회에서 장기간 논의가 이루어지는 동안 많은 제도 개선 과제가 도출되었고 동 내용은 저희 안전에 반영해두었음. 이상 안전검토소위원회 논의 경과에 대한 설명을 마칩.

- (위원)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처음 가보는 길이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자본시장법과 지배구조법이 동시에 같이 논의되다보니까 혼란이 많이 가중된 측면이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긴 기간의 논의를 통해서 논리적 완결성을 거의 완벽하게 맞춰낸 안건을 만들어 냈다는 점에 대해서 금융위, 금감원 직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임. 다만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함. 먼저 NH투자증권(주)의 경우는 문서상으로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으나 문제가 되는 내부통제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을 제재양정에 감안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케이비증권(주) ●●● 대표의 경우에는 취임후 전임 ♥♥♥ 사장 때 만들어진 기존의 규정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고, 비록 상당한 기간 동안 문제가 치유되지는 않았지만, 내부통제 문제점을 찾아내고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측면 정도는 제재양정에 감안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음. 제도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과 지배구조법 이 두개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완전히 분리해서 논의를 했어야 하고, 금감원 감사의 경우도 완전히 분리해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내부통제 이슈는 내부통제 이슈로서 봐야 하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마련이 되지 않았다면 그것에 따른 제재가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 맞음. 미국 같은 경우는 내부통제나 컴플라이언스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과징금이 수백억 원 단위로 부과됨. 그래서 이 내부통제를 별도의 검사체제로 가져가고 과징금이나 과태료의 경우도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제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또한 수습노력에 대해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서 수습했느냐, 그전에 했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감경사항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임. 사실 부당권유를 통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서 피해보상을 했든 또는 사전적으로 피해보상을 했든 이것은 내부통제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자칫 잘못하면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 될 수 있음. 그래서 완전히 분리해서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임.

- (위원) 지난 오랜 기간 14차례 안전검토소위원회를 거쳤고, 사실은 금융위, 금감원 실무자들이 그동안 오늘의 결론을 도출하는데 너무 고생이 많았음. 그래서 제가 이것은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는 생각도 하면서, 법리적 판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전반적인 대응논리도 함유하는 형태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함. 지난주에 내부통제 제도개선이 획기적으로 보완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음. 그리고 오늘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등 내부통제기준 미마련에 대한 제재안이 확정될 시점임. 내부통제기준 미마련의 책임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지에 관한 오늘 금융위 결정이 우리나라 금융제도 운영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한 획을 긋는 매우 중대한 사건임에 틀림없다고 봄. 그간 금융위와 금감원은 DLF 사건에서의 1심, 2심, 대법원 판결을 정밀히 분석해서 법리상 내부통제기준 미마련의 판단과 관련한 세부요건들을 재점검하였음. 이후 라임펀드와 옵티머스펀드 사건의 사실관계에 동 요건을 적용해서 제재가 정당화되는 요건 사실에 부합되는지를 심도 있게 분석해왔음. 오늘 결정은 그 오랜 기간 고민을 거듭한 산통의 결과물임. 우선 현행 법령 및 하위 법규, 내규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권사의 경우에 내부통제기준 미마련의 최종적인

책임을 지게 될 행위자는 CEO임이 너무도 명백함. 행위 책임의 원칙에 따라 이들 CEO를 대상으로 재직기간 중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였는지 여부를 심의하였음. 이들 CEO에게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미마련의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3가지 세부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정밀하게 살펴봤음. 이것은 대법원 판결의 골격이기도 함. 첫째, 법령의 취지를 위반해서 실질적 중핵 기준을 미마련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흠결이 있다고 판단했음. 형식적으로 내규가 존재하지만 단지 선언적이거나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 뿐 실효성이 없음으로써 개별 사건에서 효용이 없고 작동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현실적인 구현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음. 둘째, 금융회사 내 상품설계부서, 영업부서, 리스크감시부서, 소비자보호부서 등이 있음. 이들이 최소한이나마 조직적으로 분화되고 독립되어서 견제, 균형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는 여부도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음. 예를 들어 초기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려는 위원회에서 펀드 선정을 결의할 때는 리스크관리부서 및 소비자보호부서 등과 제대로 된 합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는지를 보고 실효성 여부를 판단했음. 셋째, 상품판매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명백히 금융사고의 예측가능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비한 방지책을 규정화하지 않은 경우 내부통제기준 미마련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음. 이것은 대법원 판결의 3가지 핵심요건이기도 하고 이 요건에 따라서 요건사실을 재검토했음. 그 결과 이렇게 법원이 제시한 세부 판단기준을 가지고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사건들의 요건 사실 및 법률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오늘 확정되는 모든 금융회사의 제재 건은 그 요건들을 충분히 충족한다고 판단

하였음. 라임펀드 사안에 있어서는 제조와 판매단계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PBS, TRS로 기능한 증권사가 있고, 단지 판매에만
 관여했고 전사적인 차원의 판매독려도 없었던 증권사가 있었음.
 이 내부통제기준 미마련의 책임은 명백히 도출됐지만 양자 간에는
 책임이 차별화되어야 하고, 그래서 합리적인 양정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되었음. 옵티머스펀드 사안
 의 경우에는 운용사에 대한 심사기준 미마련, 상품승인소위
 원회 심의결과 확인 및 재심의 절차 미마련 등이 있었고 결국
 대규모 투자자피해로 연결되었다는 점을 확인했음. 그래서 마
 지막으로 이번 사안은 내부통제기준 미마련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림. 내부통제기준 미마련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이것은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사안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음. 내부통제기준
 미마련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쟁점이 문제되는 것임에 반해서
 불완전판매는 자본시장법의 쟁점이 문제됨. 따라서 양자의
 쟁점이 혼란스럽게 중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DLF 대법원
 판결이 나온 상태에서 내부통제기준 미마련에 관해서는 오늘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음. 이를 저희가 쪽 펼쳐놓고 스펙트럼의
 양 극단에 있는 사안을 먼저 추려냈고 중간에 있는 사안들을
 차별화해서 사안별로 전체적인 양정을 합리적으로 도출하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었음을 강조함. 이 자리를 빌어서
 금융위와 금감원 실무자분들 너무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음.

- (참여자) 정말 많은 실무적인 검토와 보완을 통해서 법원 판결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제재의 적정성, 형평성, 논리적

완결성을 갖추었다는 점은 다른 위원님들 의견에 충분히 동의함. 불완전판매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간의 구분과 사후수습에 대한 고려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음.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불완전판매나 사후수습, 사회적 파장 부분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고려해야 할 것은 아님. 다만, 예를 들어 인허가 과정에서 과거의 불법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신용 부분들을 감안하여 인허가를 하는 것처럼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없음. 내부통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의 가장 기초적인 원인이라고 생각됨. 라임·옵티머스 사건이 일으켰던 사회적 파장이나 만기 미스매치 문제라든지, 공모규제 회피 이슈라든지 다른 제재사안들이 진행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부통제기준의 미마련, 아니면 불충분하고 실효성 없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어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릴. 그런 점에서 라임·옵티머스 사안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판단하였음. 외국에서 글로벌 위기 때 비슷한 고난도 금융상품이라고 하는 Complex Products 문제가 발생했었음. 당시 외국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보면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이사회라든지 주주총회를 통해서 스스로 시정 노력을 하고 당국이 지켜보면서 적정하게 처리를 하는 과정이 있었음. 하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아쉽게도 자체적인 이사회라든지 주주총회의 시정 노력이 없고 당국이 검사에 착수한 이후에 사후적으로 일부의 어떤 사후수습 노력이 진행되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못이 없다는 항변 내지 방어과정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음.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현재 안전검토소위원회의 제재수준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 안전검토소위원회에 직접 참여해서 심도 높은 논의를 진행해 주신 위원님들과 보좌해 주신 금융위, 금감원 직원분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기간 동안 요건사실 구비 여부, 정합성 등을 검토한 결과인 안전소위의 결론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대부분이 안전검토소위원회 결론을 유지하는 쪽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는데,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지?
- (위원)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볼 때 안전검토소위원회 결론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음. 제352호 안전과 관련하여 신한투자증권(주)은 ❶TRS 업무 관련 특정 거래상대방과의 거래 편중 방지를 위한 한도 부여 등 체계적인 업무절차, ❷TRS 기초자산의 추정 기준가격 입력 과정에 필요한제3자의 적절한 내부통제절차, ❸내재위험 평가 절차 등 상품선정 및 출시를 위한 체계적인 심사절차 등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치사유를 수정의결하고, ■■■ 前대표에 대해서는 지배구조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을 함께 조치하였다면, 직무정지 4.5월 상당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치생략이 아닌 직무정지 1.5월 상당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며, 나머지 조치안은 원안의결하겠음. 제353호 안전과 관련하여, 케이비증권(주)은 ❶거래상대방 또는 기초자산이 펀드인 경우

세부자산 현황 관리 등 TRS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절차, ②TRS 거래 관련 담보수취 여부 및 그 적정성 등에 대한 리스크부서의 점검·확인절차, ③파생상품 관련 가격 임의조정을 통한 약정이익 제공 등 불건전거래 방지를 위한 확인절차, ④소비자보호부서 및 리스크관리부서의 견제기능을 반영한 WM상품전략위원회의 적정한 리스크심사 업무절차 등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치사유를 수정의결하고, ○○○ 대표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리스크 관리 노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금감원 제재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한 1단계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문책경고가 아닌 직무정지 3월로 수정의결하고, 나머지 조치안은 원안의결하겠음. 제354호 안건과 관련하여, 대신증권(주)은 ①리스크 관리부 전결상품에 대한 리스크관리부의 상품출시 적정성 검토기준 및 업무절차, ②리스크관리부 전결상품에 대한 사후 위험관리기준, 투자자 정보제공, 소비자보호업무 및 관련조직 규정, ③영업점의 금융상품 판매·홍보 등 통제를 위한 세부 기준 등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치사유를 수정의결하고, 펀드판매에만 관여한 점, 전사적인 판매 독려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행위자인 前 대표이사 ◆◆◆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3월 상당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에서 1단계 감경한 문책경고 상당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로 수정하며, 행위자인 ◆◆◆이 1단계 감경됨에 따라 보조자인 부회장 ♠♠♠에 대한 조치도 문책경고에서 1단계 감경한 주의적 경고로 수정의결하고, 나머지 조치안은 원안의결하겠음. 제355호 안건과 관련하여, NH투자증권(주)은 ①기존 운용사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등 관련 심사기준, ②상품승인소위원회

제기 문제점에 대한 확인·검증, 재심의 절차 및 상품 심사시 구체적인 평가기준, ③신탁계약서의 내용을 투자계약서와 비교·검증하는 절차 등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치사유를 수정의결하고, 나머지 조치안은 원안의결하겠음. 제356호 안건은 원안의결하겠음. 제357호 안건과 관련하여, (주)신한은행은 ①펀드 투자구조·위험성의 확인·검수 및 시리즈 상품 추가 출시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 기준, ②사모펀드 선정·출시에 있어 정성평가 관련 평가지침, ③상품제안서에 대한 소비자보호부서의 검토 및 준법감시부의 심의절차 등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치사유를 수정의결하고, 나머지 조치안은 원안의결하겠음. 제358호 안건과 관련하여, (주)신한금융지주는 ①WM사업부문 내 금융상품 판매에 있어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금융지주에서 자회사로 전달되는 체계, ②자회사 등의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자회사 등이 적절한 내부통제를 갖추도록 관리하는 절차 등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치사유를 수정의결하고, 나머지 조치안은 원안의결하겠음.

- 제356호 안건은 원안의결하고 나머지 안건은 각각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제356호 안건은 원안의결하고 나머지 안건은 각각 수정의결함

- (위원) 약 3년 동안 논의해온 사모펀드 사태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건에 대한 조치가 일단락되었음. 아무리 내부통제 관리노력을 기울이더라도 사람에 의한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는 있음. 그러나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여서, 또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고는 줄여야 하며, 누가 어떤 업무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는지도 사전에 명확히 규율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부터 준법과 내부통제에 대한 충분한 관심과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주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금융권의 내부통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동 법안이 통과되고, 시장에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입법노력과 후속법령 개정작업도 힘써주시길 바랍. 또한 금감원도 관련 모범규준이나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마련하여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편 금일 회의 종료 후 보도참고자료가 배포될 예정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3) 보고안전 심의

☐ 보고안전 제32호 『금융투자업 인가 등의 심사 진행상황 중간 보고』를 상정하여 서면보고함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보고안전 제33호 『2023년 3분기중 은행의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현황 보고』를 상정하여 서면보고함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보고안건 제34호 『2022년 12월말 기준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에 대한 자격심사 결과 보고』를 상정하여 서면보고함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3년도 금융위원회 제21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5시 26분 폐회)